

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

2015. 5. 6



국무조정실

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



I. 규제개혁 1년

II. 규제개혁 평가

III. 2015년 규제개혁 추진

규제개혁장관회의

- ▶ 끝장토론으로 현장애로 직접 해결
- ▶ 실천과 성과 중심의 강력한 모멘텀

경제활성화 규제혁파

- ▶ 건축·입지·서비스 등 분야별 규제개선
- ▶ 경제규제 10%감축, 손톱 밑 가시, 규제기요틴

규제정보포털 전면개편

- ▶ 규제신문고, 모바일 서비스
- ▶ 법안처리 현황, 지자체 규제정보 제공 등

규제시스템 혁신

- ▶ 규제비용총량제 도입
- ▶ 행정규제기본법 전면 개정 추진

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기반 마련

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

77건 中
76건 개선 98.7%

부분완료 1건: 개인자산 종합관리 계좌 도입

✓ 산단 녹지내 공장증설시 부담금 감면

* 여수산단내 기업 572억원 부담완화, 설비투자 2.6조원 유도

손톱 밀 가시

288건 中
286건 개선 99.3%

추진중 2건: 공항물류단지, 특정대기 오염물질

✓ 지구단위계획구역 연접토지내 동일건물 건축 허용

* 화성시 s전자 시설투자 7조원

규제기요틴

114건 中
103건 개선 90.3%

추진중 11건: 상반기내 조치완료

✓ 경자구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 완화

경제규제 10% 감축

목표 987건
995건 폐지확정

완료 433건, 국회심의중 562건

✓ 정보통신공사업자의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 폐지

국민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창구

- 월평균 접속자 5배 증가
* '13년: 3천여명 → '14년: 1.4만여명
- 건의에서 개선까지 실시간 정보 공개

규제신문고 “국민 규제개선 청구권” 보장



국민 10명 중 7명 규제개혁 신문고 인지



‘투명한 공개’로 규제개혁 신뢰 확보

규제비용총량제 추진 기반 조성

- ✓ 규제연구센터 지정(KDI·행정연구원), 시범부처 확대 ('14년 8개 → '15.4월 14개)



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추진 ('14.8월 국회제출)

- ✓ 규제비용총량제, 네거티브·일몰제 등
- ✓ 행정규제 업무기준 ('15.4.1 시행)

미등록규제 정비

- ✓ 37개 부처 4,747건 발굴, 525건 정비 (폐지 316건, 완화 209건)



긍정적 평가



- * 대한상의('14.12.23)
- * 100이 넘으면 지난해보다 개선



* 중기중앙회('14.12)

부정적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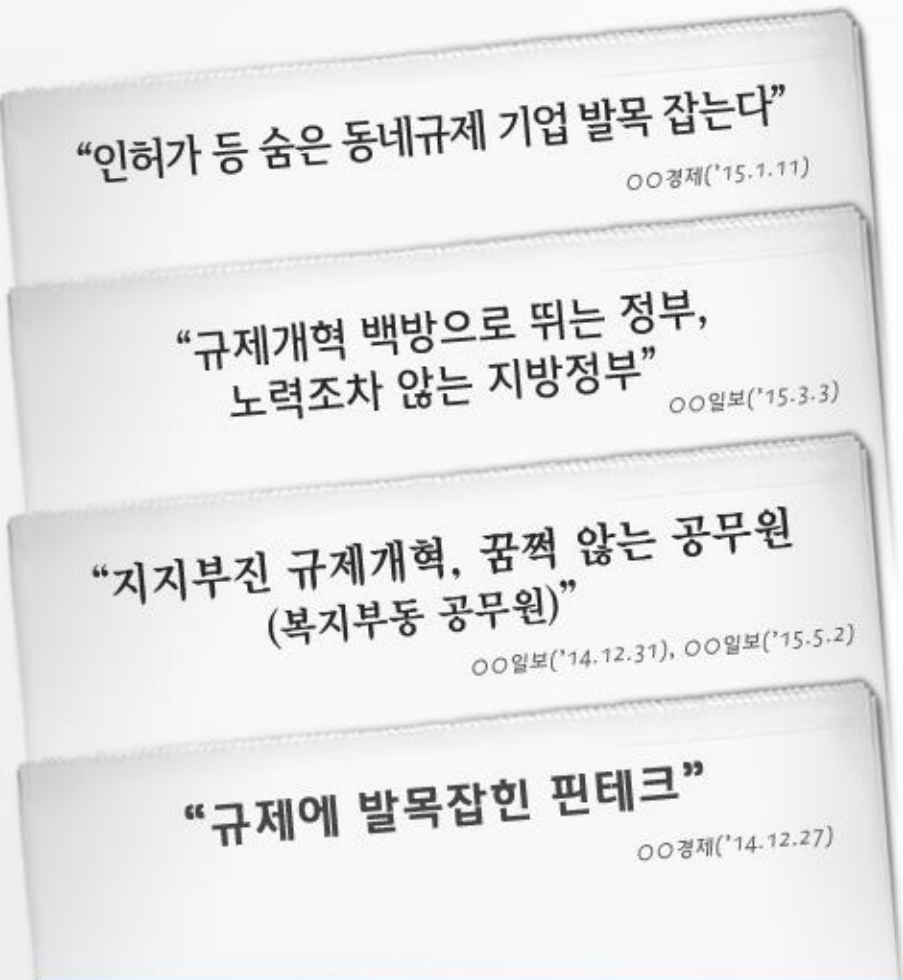


* 중기옴부즈만('15.3)



* 법제연구원('15.3)

3천여건 量的 개선에도 국민체감도 저조



← 현장이 요구하는 규제개혁 분야 →

- 대한상의('14.12)



- 중기중앙회('15.3)



경제 파급력이 큰 핵심분야 규제의 질적 개선요구

量的 개선에서 質的 개선으로 패러다임 전환

1 파급력 큰 핵심분야 규제 신속 개선

2 지방규제 집중 개선

3 기업 현장규제 발굴 · 혁파

4 지속적인 규제시스템 개혁

5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강화

경제활력 회복 적극 뒷받침

예시

1 입지 규제

- ▶ 개발제한구역, 비도시지역 공장입지 개선
- ▶ ‘경제자유구역 규제 Free Zone 도입’ 등 경자구역 규제혁신

2 금융·관광 등 유망서비스업 규제

- ▶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 규제혁신
- ▶ 호텔·리조트, 해양서비스업 등 관광인프라 규제혁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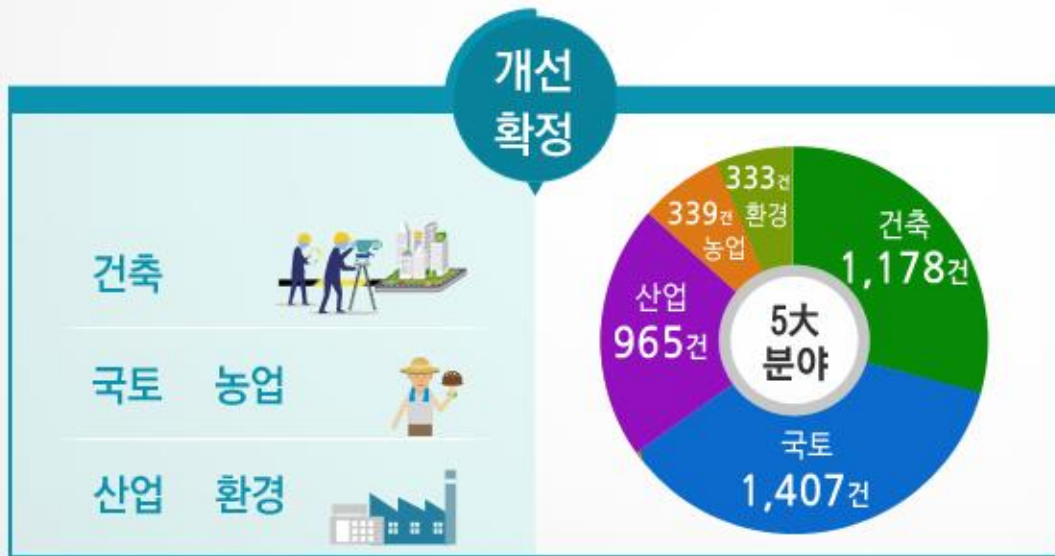
3 융복합·신산업 / 기업인증 규제

- ▶ 융합 촉진형 규제프레임 확산
- ▶ 핀테크, 자율주행차 등 융복합·신산업 육성
- ▶ 기업부담 인증정비, 신설 인증심사 강화

경제혁신 저해 규제 혁파

규제개혁 최초 11대 분야 지방규제 전수조사

- * **조사기준** 상위법령 불일치, 법령 미근거, 위임사항 소극적용
- 5대 분야 4,222건 개선과제 확정('15.4월)
- 6대 분야는 과제발굴중
- 점검(월단위), 평가강화를 통해 이행력 확보



법령에 없는 지방규제 일제 정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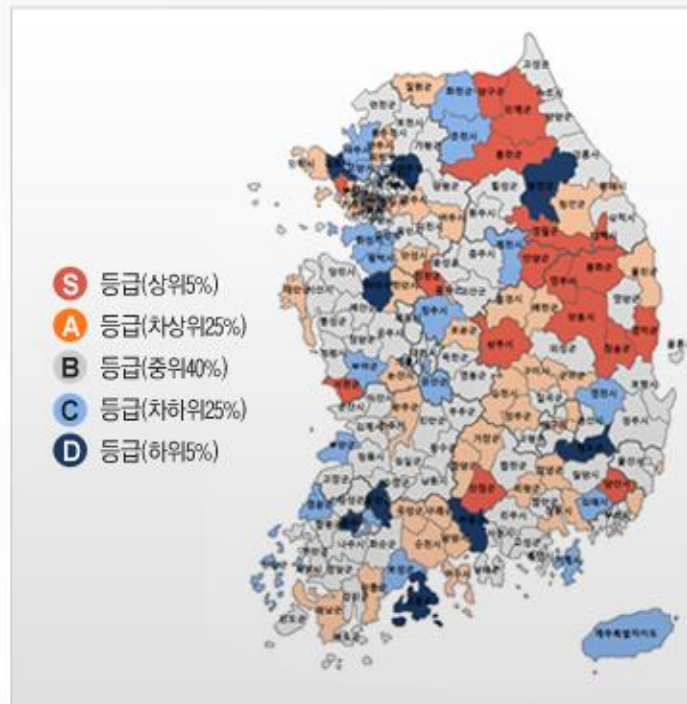
전국규제지도 : 지자체간 자율경쟁 촉진(대한상의)

조사대상 기업 및 조사분야 확대

- * **조사대상 기업** 6천여개 → 8천여개
- * **조사분야** 5개(공장설립, 창업 등) → 10개(공공계약, 환경 등 추가)

적극행정 면책 등 행태변화 유도

- *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('14.9월), 감사원법 개정·시행('15.2월)
- * 적극행정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·시행(감사원, '15.2월)
- * 사전감사 컨설팅 확산



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

7개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(’15.3~4월)

- * 대한상의, 중기중앙회, 전경련, 무역협회, 중견기업연합회, 벤처협회, 소상공인연합회

160여건 접수
6월중 개선



기업현장으로 (손톱 밑 가시) 지속 발굴, 신속 해소

- *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개최
(’15년 40회 목표, 월평균 3.3회)

경제혁신 저해 규제 끝까지 추적·개선

공장 신·증설 및 산업단지 관련 규제애로 조사 ('15.3.26~31)

(현장조사 개요) 국조실·산단공 등으로 10개 팀 구성, 전국 21개 산단 및 개별입지 기업 43개 현장방문

투자저해 5대 분야 규제개선 상반기 마무리

공장 신·증설 인허가
절차 단축

용도지역 및
입지규제 개선

산업단지
운영 개선

문화재 규제
합리화

환경규제
개선



규제가 공장 신·증설 발목잡지 않게 개선

규제비용총량제 전면 실시 추진



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 도입 추진 ('15.7월)

* KDI 중심으로 시스템 개발중



규제등록체계 전면 개편('15.7월)

* 조문단위 등록기준 명료화, 투명성 제고



규제품질 제고 위한 항구적 인프라 구축

규제개혁신문고

신속처리제(fast track) 도입

- * 부처답변 2주, 소명 3개월
→ 부처답변 1주, 소명 1개월(투자결정 등 시급한 경우)

부처소명에 대한 민간전문가 검토 강화

- * 민간자문단 운영 → 규개위 심의(개선권고)



규제정보포털



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(생활법령 연계) 강화

외국인 소통창구(규제신문고) 개설

국민소통 · 참여를 통한 상시적 규제개혁

현장·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을 통해
경제활성화와 경제혁신을
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.

